

“친노에게만 잘못 물을 수 없다 민주당 정체성 회복이 급선무”

■ 원내대표직 사퇴 박지원 의원 직격 인터뷰

대선 패배의 후폭풍이 민주통합당을 뒤 흔들고 있다. 당장, 당의 진로와 관련, 주류와 비주류 간의 신경전이 증폭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박지원 의원(목포시)은 24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민주당의 정체성과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며 “조심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 주목을 끌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호남 열망 잘 포용해야朴 당선인 성공”

-대선 패배의 소회는

▲ 절려고 노력했어도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하지만 패배했다. 눈물나게 안타깝다. 대선 패배 이후,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했는데 재래시장 상인 등 서민들의 원망의 눈초리가 저를 울게 만들었다.

-대선 패배의 요인은.

▲ 요인이야 한이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 안철수 전 후보만 바라보며 후보단일화 논리에만 매몰됐다. 여기에는 대선 주자 TV토론에서 이정

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오버한 것도 중동층이 돌아선 계기로 본다. 국정원 여직원 불법 댓글 의혹에 대한 역풍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도 악재로 작용했다.

-대선 결과, 호남의 고립구도가 형성됐다.

▲ 호남의 고립 구도로 보지 않는다. 행동하는 영상이 폭발한 것이다. 민주주의 복원, 민생 회복, 남북 관계 정상화에 대한 열망이 터져 나온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대 정신을 담겨 있는



-민주당의 진로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합 등 새로운 것만 찾다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일각에서 ‘민주당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옳지 않다. 스스로의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내부 동력을 만들고 과감하게 외연을 확장한 뒤, 국민에게 신뢰를 쌓아가 수권정당으로 서야한다. 특히,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개혁이다. 지나치게 좌파적으려서 충선과 대선도 패배했다. 민주당은 정체성과 역량을 복원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지역 정치권이 훈을 담아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에서도 인물을 기워야 한다.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 단체장 자리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크게 봐야 한다. 민심과 소통을 바탕으로 과감한 정치적 도전에 나서야 한다. 정치력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설이 있는데

▲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가능성은 1%도 없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연내 선출

대선 이후 지도부 공백 사태 최소화

주류-비주류 맞대결 권력투쟁 예고

민주통합당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

겸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 대선

패배 이후 지도부 공백 사태를 최소화

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비대위원장 지명권 유무 등을 놓고 친노(친노무현)

세력 중심으로 한 주류와 비주류 층

이 갈등을 연출하면서 앞으로 원내대

표 선출을 놓고 세력 간 권력투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

및 의원 연설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임토록

결정했다고 이연주 원내대변인이 전

했다. 표결에서는 친성이 45명, 분리

연설회의에 앞서 당무위는 대표권

한대행인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비

대위원장 지명권 유무와 관련해

대표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에 권한이 없는 것으로 유권 해

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까

지 주류와 비주류는 치열하게 대립했

다.

후보등록 및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비대위원장 겸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28~31일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기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

인 내년 5월초까지다.

민주당은 18 대선 패배의 원인

분석과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내 선출될 비대위원장이 대선행정기

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연설회의에 앞서 당무위는 대표권

한대행인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비

대위원장 지명권 유무와 관련해

당무위는 대표권 유무와 관련해